



주간 통일정세

2012-4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김정은 "비사회주의적 행위, 엄격히 다스려야"(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년 만에 전국 규모의 사법검찰기관 간부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은 "전국 사법검찰일꾼 열성자대회가 26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대회에서는 검찰부문 회의와 재판부문 회의가 각각 진행됐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란 제목의 서한을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전달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사법검찰기관은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라며 "사법검찰일꾼들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힘.

- **北당국, 리영호 찍힌 '1호 사진' 회수(1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 7월 해임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찍힌 '1호 사진'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북한주민은 "중앙에서 그를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찍었다는 소문이 지난 8월부터 돌기 시작했다"며 "인민군대 산하 당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리영호 사진을 거둬가기 시작했다"고 밝힘.

- **北 허종 쿠웨이트 대사 교체(11/27, 연합뉴스)**
 -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8년여 부임기간을 마치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27일 쿠웨이트 왕실 사이트에 따르면 허 대사는 이달 25일 작별 인사차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 알 사바 국왕과 셰이크 자베르 무바라크 알 사바 총리를 예방함.
 - 허 대사는 2004년 3월부터 8년 8개월간 쿠웨이트에 주재하면서 2008년에는 항공협정을 체결하기도 함.



- **北 리영호 숙청 증거 찾을 수 없어(11/27, CCTV)**

 - 중국 국영 CCTV는 27일 "현재로선 리영호 전(前) 북한 총참모장이 숙청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도함.
 - 방송은 "조선(북한) 당국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함.
 - 또한, 방송은 지난 7월 경질된 리영호 전 총참모장이 지난 10월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반당·반혁명분자, 군벌주의자로 규정됐으며 리영호 부인의 마약거래 혐의가 적발됐다고 일본 언론매체가 보도하면서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소개함.

- **靑 "김정은, 충성심 따라 '군 수뇌부' 대거 교체"(11/29,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군 지도부를 대거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 격인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김정각 차수를 6개월 만에 경질하고, 군부 강경파 김격식 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힘.
 - 김 대장은 지난 2010년 황해도 일대를 관할하는 4군단장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군부 내 대표적 강경파 인물로서 한 때 상장으로 강등되기도 했지만 최근 대장으로 복귀됐음.

- **北김정은, 中대표단 면담...시진핑 친서 전달받아(종합)(11/30,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0일 방북 중인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함.
 - 중국 공산당 대표단장인 리젠궈(李建國)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이 전함.
 - 리젠궈는 "두 당,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 주신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다지고 훌륭하게 건설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김 제1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대회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며 중국이 공산당의 영도 아래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방송이 전함.
 -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접견에서 중국 공산당 대표단으로부터 시진핑 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北, 기록영화 통해 김정일 육성 추가 공개(종합)(12/2,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12월17일)를 맞아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준비 중인 북한이 2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김 위원장의 젊은 시절 육성을 추가로 공개함.
 - TV는 이날 오전 '아버이 장군님 노동계급과 함께 계시여'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생전 각종 생산현장과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던 장면을 방영하며 김 위원장의 육성 강연을 공개함.
 -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김일성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가장 정확한 지침과 방도라고 주장하며 "혁명 위업의 전투적 승리를 위해 힘써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11/26,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11.26,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리명수, 리병삼 등 참가
- 11/26, 김정은 黨 제1비서, 11.26 '전국 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전달(11.26,중통)
 -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 현상 차단을 위한 준법교양 강화 등 '수령·정책·제도·인민보위' 강조
- 11/30,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금수산태양궁전광장 공원조성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11.30,중방)
- 11/30, 김정은 黨 제1비서, 11.30 中 공산당 대표단('리건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면담 및 습근평(習近平/시진핑) 총서기 친서 접수(11.30,중방·중통)
 - 北 : 김기남·김양건(黨 비서)·김성남(黨 부부장)
 - 中 : 왕가서(대외연락부장)·왕효휘(선전부 부부장)·류결일(대외연락부 부부장)·요증(감찰부 부부장) 및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석
- 12/1, 김정은 黨 제1비서, 12.1 '사회과학원' 창립 60돌 관련 과학자·일꾼들에게 서한(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달(12.1,중통)
 - 北, 12.1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서한' 전달모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중통·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서한 전달),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용진 등 참가
- 12/1, 김정은 黨 제1비서, 12.1 라오스 정부수립 37돌 즈음 '쫄말리 싸이나싼' 주석에게 축전(12.1,중통·중방)
 - 최영림(총리)·박의춘(외무상), 12.1 라오스 수상과 외무상에게 축축 축전(12.1,중통·평방)



나. 군사

● IAEA "북한, 새 경수로 건설 진척"(11/30, 연합뉴스)

- 북한은 핵폭탄용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더욱 진척시켰다고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IAEA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이 경수로 공사를 계속해왔으며 주요 건물 외장작업을 대체로 마쳤다"고 밝혔으나, IAEA가 북한 경수로의 설계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언제 가동을 시작할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함.

● 北, 이달 10~2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종합2보)(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1일 공식 발표한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은 전번(지난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케트는 '은하-3'이라고 설명했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고 위성발사와 운반 로케트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며 "이번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일본 등 관련국에 로켓발사 계획 통보(12/2, 연합뉴스)

- 북한은 이달 중순 발사할 장거리 로켓이 지나가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등 관련 국가들에 로켓 발사 방침을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러나 아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으며,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해당국가의 항공관제 당국에 발사 시기와 경로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일본 등이 통보받은 내용은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항공당국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날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밝힘.



■ 기타 (군사)

- '항공절(11.29)' 기념모임, 11.29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위병대 분열행진·비행대들 기교비행 등 진행(11.29,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경희, 김격식,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로두철, 조연준, 리병철 등 참가
- 北 인민무력부, 11.29 최룡해(차수) 등 참가下 '항공절' 경축 연회 개최(11.29, 중통·중방)
- 김일성 父子의 '항공 및 반항공무력 창설과 강화발전' 칭송 및 그간 '항공무력 활약상(美B-29 격추 등)' 과시(11.29, 중방·노동신문·중통/승리와 위훈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항로·무적의 항공무력 등)

다. 사회·문화

● 北 영아·산모 사망률 1990년대 초 보다 높아져(11/26, 연합뉴스)

- 북한의 영아사망률(출생 후 1년 이내 사망)과 임신·분만 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하는 모성사망률이 1990년대 초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밝힘.
- 북한어린이를 지원하는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각종 국제기구 자료 등을 분석해 26일 내놓은 '2012년 북한 보건의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3년 1천 명 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남한은 9.9명에서 3.5명으로 낮아졌음.
- 2008년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남한의 5.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7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모성사망률(10만 명 분당 기준) 역시 1993년 54명에서 2008년 77명으로 높아졌음.
- 지원본부는 "가정에서 출산할 때 사망 위험이 컸다"면서 "또 (산모들의) 병원 이용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피임기구 등이 부족했다"고 전함.

● 北, 자연재해 위험지수 세계 7위(1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자연재해 때문에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독일 비정부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 Watch)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저먼워치는 1992~2011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그 피해를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3년 국제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후위험지수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악화해 전체 7위로 평가됐다고 밝힘.
- 이 단체의 라리사 뉴바우어 대변인은 RFA 측에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37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며 북한은 해마다 평균 2건의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봤다고 전했으며, 자연재해



가 발생할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의 8%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본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재난대처 능력이 취약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힘.

● **北김정은 '어머니날' 이어 '항공절'도 제정(11/29, 노동신문)**

- 북한이 우리의 공군에 해당하는 '항공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29일을 '항공절'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동신문이 29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승리와 위훈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항로'라는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5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찾아 항공대가 창설된 날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11월29일을 항공절로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또한, 김일성 주석은 1945년 11월 29일 신의주항공협회에서 한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항공대 조직 구성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2년 뒤인 1947년 정규 비행대를 조직했다고 보도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노동당 출판사, 김정일 업적 선전도서 '백두산의 아들(4)' 출판(11.26,중통)
- 인민군 · 돌격대원들의 두달 남짓 기간 '검덕지구 폭우피해(태풍15호) 복구' 성과(2,000여 세대 살림집 건설 · 단천-백금산철도 개통 등) 치하(11.27,중통)
- 국가과학원 집적회로연구소, 나노기술이 응용된 소형공기정화기 제작(11.28,중통)
- '진달래아동기금' 설립 및 기부금 기증식, 11.29 김정숙(대외문화연락처 위원장) 및 진달래아동기금 설립 대표단(단장 : 진달래 싸파리니)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29,중통 · 평방)
-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종군작가 김옥성'(제1, 2부) 제작(11.30,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선박, 소말리아 해상서 시멘트 버리다 억류(11/26, 엔케이뉴스)**

- 북한 선적의 화물선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못쓰게 된 시멘트를 몰래 버리다 소말리아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엔케이뉴스가 26일 보도함.
- 26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엔케이뉴스'(www.nknews.org)가 소말리아 현지 라디오 방송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소말리아 반자치주인 폰트랜드 보안당국은 항구도시인 보사소 연안에서 북한 선박



-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km² 우선 추진(11/28,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관리를 추진 중인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 가운데 일부 부지를 우선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은 전체 면적이 14.4km²에 이르는 황금평 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이 중 1.6km² 규모의 '초기 시작구역'을 먼저 건설할 방침임. 이곳에는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가스, 난방 등 기반 시설 이외에 황금평 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세관, 교역센터, 표준 공장 건물, 보세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관리위 청사는 지난 9월15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했다고 밝힘.

- **중국 도문-북한 온성 겨울철 1일 관광 개시(11/28, 신화통신)**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도문(圖們)시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을 연결하는 겨울철 1일 관광코스가 개통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함.
 - 이 관광코스는 아침에 두만강변에 있는 도문 출입국사무소를 출발한 중국인 관광객이 다리를 건너 온성군 남양구에 도착, 관광버스를 타고 하루 동안 온성군 일대를 관광하는 일정으로 오전에 왕재산 혁명박물관과 기념부조, 혁명사적비, 두로봉 등지를 둘러보고 오후에 아동문예공연을 관람한 뒤 저녁에 도문시로 돌아오는 일정이고, 매주 월요일~토요일에 출발하며 요금은 1인당 480 위안(8만4천 원)임.

- **北 "유엔 인권결의는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1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적들의 정치모략 선전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3위원회에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조작해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판에 박힌 허위 날조자료들로 일관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 선전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서방 세력들은 날로 높아만 가는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해마다 가소로운 정치협잡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유럽국 상대 평화자동차 투자유치 노력(11/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평양에 상주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외교관들의 평화자동차 공장 시찰을 최근 주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폴란드 대사관 관계자를 포함해 평양에 상주하는 EU 국가의 외교사절들이 이달 초 북한 외무성 주선으로 평화자동차(현지 법



- 인명 평화자동차총회사) 남포공장을 시찰했다고 폴란드 외교부가 밝힘.
- 북한은 이번 시찰에서 평화자동차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차량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승용차를 비롯해 밴, 지프, 소형버스 등 1만대의 차를 생산했다고 설명함. 또 공장시설을 연간 10만 대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충해 완성차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중리젠궈 전인대 부위원장 방북(종합2보)(11/29,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중국의 리젠궈(李建國)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젠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으며, 대표단은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왕샤오후이(王曉暉) 중앙선전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힘.
- 북한 측에서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비행장에 나가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중국공산당 대표단은 방북 첫 일정으로 평양 만수대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함.

● **北, 10월 中곡물 수입량 작년비 62% 감소(12/1,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가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이 1일 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 중국에서 밀가루, 쌀,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을 2만2천33t 수입했는데, 이는 올해 9월 수입량 3만5천730t보다 38% 줄어든 것이며 작년 동기(5만9천369t)에 비해서는 62%나 감소한 수준임.



■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부 대변인의 '독도 관련 韓日 마찰 우려 및 韓美日 동맹 중요성' 언급 관련 '3각군사동맹을 발동해 亞·太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선전공세의 일환'이라고 비난(11.26, 중통·노동신문/위험한 군사적 결탁을 노린 선전공세)
- 北외무성대변인, 유엔에서 '北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중통기자와 문답을 통해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선전물"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11.28, 중통·평방)
 - 우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권의 고상한 이념을 악용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어째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전면 배격하며 준열히 단죄함.
- 北 당 대표단 - 中 당 대표단 회담, 11.2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1.29, 중통·중방)
 - 北 : 김기남(비서)·리영식·김성남(부부장), 中 : 리건국(李建國, 정치국 위원·술人代 상무총 부위원장)·왕가서(대외연락부장)·왕효휘(선전부 부부장)·류결일(대외연락부 부부장)·요증(감찰부 부부장) 및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
 - 회담에서는 중국 공산당 제18차대회 진행 정형이 통보되었으며 두 당, 두 나라間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의견교환
 - 北 노동당, 11.29 김기남·김영일(黨 비서)·리영식·김성남(黨 부부장) 및 류홍재 등 참가下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위해' 옥류관에서 연회 개최(11.29, 중통·중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신문 '대선개입설' 반박... "누가 되든 신경 안 써"(11/2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대선개입설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남조선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가 아니라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며 "이것은 북남관계의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이것을 두고 대선개입이니 뭐니 하는 것이야말로 피해망상증에 걸린 자들의 생트집"이라고 주장함.
 - 또 "우리는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라며 "그러나 우리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면서 북남관계를 해치고 민



족의 운명을 농락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박근혜, 대북정책 명백히 밝히라" 공개질의(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일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개 질문을 던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발표한 '공개질문장'에서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본입장이 무엇이며 앞으로 북남 관계를 실지로(실제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조평통은 7개 질문이 담긴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선 핵포기론'은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 3000'과 한치도 다른 것이 없으며 그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북한인권법ियो 뭐요 하는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북한인권법 추진을 비난함.
 - 조평통은 이 밖에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 기존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통일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세를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로켓 1단 추진체 서해 낙하 예정(12/2, 연합뉴스)**
 - 북한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1단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이달 10~22일 중 오전 7시부터 12시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면서 "발사 후 1단계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쪽 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은 이런 내용을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일본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中매체 인용 나로호 발사 연기 보도(1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일 나로호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는 소식을 중국 매체를 인용해 뒤늦게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보도함.
 - 방송은 이날 중국 관영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 보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장거리로켓 발사 명확징후 포착..12~1월 가능성"(11/27, 연합뉴스)
 - 군 당국은 북한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군의 한 고위 소식통은 27일 "이달 초 장거리 미사일 동체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로 이송된 이후 발사장 주변에서 발사를 준비하는 명확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현재 준비 상황으로 미뤄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이달 초 평양시 산음동 병기연구소에서 로켓 동체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기지 조립 건물로 이송했으며, 현재 발사장 주변에서 계측장비 등의 설치를 위한 차량과 인력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인 '디지털글로브'는 26일(현지시간) "서해 위성 발사기지(동창리)에서 관측된 새로운 천막, 트럭과 사람, 다수의 이동식 연료 및 산소 탱크는 북한이 앞으로 3주 내에 5번째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그러나 발사기지 주변에 아직 계측장비 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송된 로켓 동체도 발사대에 세워지지 않았음.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 일정도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육·해·공군, 해병대 주요지휘관, 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북한군 동향 등을 평가함.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군의 올해 하계훈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의 수준이 예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함. 특히 해상과 지상, 공중 전력의 합동훈련 횟수가 늘었고 해상 침투세력의 기습 침투훈련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짐.
 -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은 승계 후 권력 장악을 계속할 것이고 앞으로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불만을 잠재우도록 통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남북관계에 환상을 갖지 마라. 근본적인 이념과 체제 대결"이라며 "앞으로 대남 도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할 것"이라고 강조함. 김 장관은 "앞으로 적의 도발은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도발하면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앞으로 남북간 협력도 가능하다"고 지적함.



- 합동참모본부도 정승조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작전사, 연합사, 합동작전부대 주요지휘관이 참석한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함.

● 美·日 등, 北 로켓발사 우려...중단 요구(12/02, 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중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1일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이 즉각 우려를 표시하면서 발사 중단을 요구함.
- 특히 일본은 긴급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자위대에 파괴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북일 회담을 연기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함. 직간접적으로 발사 자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심각한 도발 행위 (highly provocative act)'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빅토리아 놀린드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그는 아울러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고립과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안보를 지키는 길은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국제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북일 국장급회담을 연기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밤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 로켓이 일본에 떨어질 데 대비해 '파괴조치준비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함. 또 5, 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북일 국장급 회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함. 노다 총리는 관계 각료회의 후 취재진에게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에 어긋나는 것으로 만약 발사를 강행한다면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함.
- 중국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중국은 우선 북중간 '당(黨) 대 당', 그리고 외교 당국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식적인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임. 중국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 자제를 요청해온 것으로도 알려짐.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동향과 관련한 물음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관련국 공통의 책임"이라고 말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치기도 함. 중국은 한국과 미국 등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비추은 것으로 전해짐. 중국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신화통신은 전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와 관련,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북한 주장대로 시종일관 인공위성이라고만 명시해 관심을 샀음.
- 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함. 북한은 19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장거리 로켓을 4차례 발사한 바 있음.

● "北로켓 1단 추진체 서해 낙하 예정"(종합)(12/02, 연합뉴스)

- 북한이 예정대로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1단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이달 10~22일 중 오전 7시부터 12시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면서 "발사 후 1단계 추진체는 우리나라 서쪽 해상에, 2단계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낙하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은 이런 내용을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일본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북한은 아직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음.
- 로켓 추진체의 낙하지점과 이동 경로 등은 올해 3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음한 지난 4월13일 발사했다가 궤도 진입에 실패했던 '광명성 3호' 때와 비슷함. 당시 북한은 ICAO 등에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서쪽 140km 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통보함.
- 정부는 해당 시간대에 서해와 필리핀 인근 해상 등 로켓 예상 이동 경로 주변의 항로를 오가는 국내외 민항기 편수와 해상 운항 선박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초 고시할 방침임.

● "北, 로켓 예상경로 관련국가에 사전 통보"(12/02, 연합뉴스)

- 북한은 이달 중순 발사할 장거리 로켓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국가들에 로켓 발사 방침을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짐. 그러나 아직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 발사 정보를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음.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해당국가의 항공관제 당국에 발사 시기와 경로 등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북한은 전날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에 진행되는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밝힘. 북한이 10~22일 중에 '남쪽'으로 발사한다고 예고한 만큼 통보를 받은 국가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국가 일부로 추정됨. 아직 어느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통보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절차상으로 보면 로켓 등 발사체를 쏘 경우 발사체를 쏘는 국가가 이로 인해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국가에 개별 통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임. 반면 위성이나 로켓 발사시 IMO나 ICAO에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님.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시 IMO와 ICAO에 사전에 통보한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두 기구에 조만



간 통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나. 미·북 관계

● 美 "北 미사일발사 준비 구체적 정보없어"(11/2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밝힘.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까지 접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소문과 언론 보도만 있을 뿐" 라고 말함. 놀런드 대변인은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환기시키고 싶다" 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조함.
- 는 최근 우리 정부 당국이 첩보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반응'이어서 주목됨.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일본이 최근 미안마로 향하는 선박 안에서 미사일 제조에 이용되는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다는 아사히(朝日)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힘. 그는 "이는 일본의 신문 한 곳에 난 기사 1개"라면서 "그 보도를 확인할 수도 없고 일본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함. 그는 그러면서 "국무부 내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전에 확인을 해 보겠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 당국이 지난 8월말 도쿄(東京)항에서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에서 'DPRK'(북한)라고 새겨진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 핵무기 제조용 원심분리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이었다고 지난 24일 보도함.

다. 중·북 관계

● "北·中 황금평 단계적 개발...1.6km² 우선 추진"(11/2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관리를 추진 중인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 가운데 일부 부지를 우선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중은 전체 면적이 14.4km²에 이르는 황금평 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이 중 1.6km² 규모의 '초기 시작구역'을 먼저 건설할 방침임. 이곳에는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가스, 난방 등 기반 시설 이외에 황금평 특구 관리위원회 청사, 세관, 교역센터, 표준 공장 건물, 보세창고 등이 들어설 예정임. 이 중 관리위 청사는 지난 9월15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했음.
- 관리위 책임자인 주임은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공산당위원회 루빙위(盧秉宇) 상무위원이 맡았으며 4명의 부주임은 북·중이 각각 2명



씩 파견하고 관리위 산하에는 건설, 투자유치, 재정, 세무 등을 담당하는 6개 부서가 설치됨. 랴오닝성은 지난달 17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관리위 직원 모집에 들어감. 모집 분야는 금융, 투자유치, 도시계획·관리, 전력관리, 환경관리, 세무, 법률 등이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중국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임금과 사회보장이 제공됨.

- 루빙위 주임은 중국경제주간과의 인터뷰에서 "황금평 특구에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단둥 의류산업의 규모, 기술, 인재를 결합한 의류기공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다롄(大連)을 비롯한 대도시를 배후에 둔 이 점을 살려 북한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인적자원을 활용한 전자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루 주임은 "황금평의 토양 특성이 단둥과 흡사하고 단둥은 중국에서 유명한 관광농업시범구인 만큼 현대식 농업도 중점 육성산업의 하나"라며 "동시에 보세구를 중심으로 한 물류·보관센터를 토대로 쌍방향 무역, 삼각무역, 금융투자서비스 등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임. 그는 황금평 특구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투자 유인책과 관련, "북·중이 현재 목적의식이 더욱 강한 정책 혜택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경제주간은 현재까지 드러난 황금평 특구의 합작모델과 관련 법률, 정책 등이 두만강 유역 경제특구인 북한 나선 특구와 거의 같으며 북·중 간 경제합작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지만 합작 기간, 관리위의 직능 규정과 인원 구성, 교역·결산 화폐단위 등 정리해야 할 세부 과제가 많다고 전함.
-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있는 압록강 하류의 섬인 황금평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참여가 없을 경우 방대한 특구의 기업 유치를 장담하기 어렵고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건설에 막대한 초기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단기간 안에 개발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 왔음.

● 中, '北 장거리로켓 발사' 사실상 반대(11/27,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 중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바란다"면서 "이에 반대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냄. 이 당국자는 "한반도 내에서 도발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그는 "국제법에 따라 어느 국가도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이 권리 행사 방식은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지적함.
- 국제적인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중국의 이런 메시지는 북한에



도 직·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관측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 채택에 찬성함.

● 외교부, '조선 위성 재발사' 관련 중국 입장 밝혀(11/28,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7일 가진 연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조선의 위성 재발사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표명함. "조선이 위성을 재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조선 측은 중국 측에 통보를 해왔는지, 그리고 중국은 조선 위성 발사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의 공동책임이자 관련 당사국의 공동이익이기도 하다."고 답변함.

라. 일·북 관계

● 일본인, 북한에 있는 친지 묘지 참배 활발(11/26, 연합뉴스)

- 지난 8월 이후 일본인의 북한에 있는 친지 묘지 참배가 활발함. 2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아이치(愛知)현 도요하시(豊橋) 시에 거주하는 구모무라 히사시(久木村久, 77) 씨가 이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북한에 남았다가 사망한 모친과 형의 묘 참배를 위해 출국함.
- 구모무라씨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모친 등의 매장지인 함흥을 방문함.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지 참배는 지난 8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임. 구모무라 씨는 1945~1946년 함흥에 체재했으며, 당시 모친과 형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방문은 일본 시민단체인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일본인 유골 수습과 묘 참배를 요구하는 유족 연합회'가 주선함. 애초 6명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지의 추운 날씨 등을 감안해 다른 유족들은 방문을 유보함.
- 북한은 지난 8월 4년 만에 일본과 정부 간 교섭을 시작한 이후 일본인 유족의 묘 참배 방문을 받아들이고 있음. 일본과 북한은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 등과 관련해 지난 8월 외교 당국 과장급 회담을 한 데 이어 이 달 15~16일에는 몽골에서 국장급 회담을 열었음.

● "北日, 내달 5~6일 베이징서 2차 국장급 회담"(11/27,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의 두 번째 국장급 회담이 다음 달 5~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이 27일 밝힘.
- 북일 양국은 지난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 1차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김정일 요리사 후지모토 "김정은에 납북자 송환 요청"(11/27, 연합뉴스)**
 - 북한의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가명)씨가 4개월 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일본 납북자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후지모토씨는 2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22일 평양에서 열린 환영 파티에서 김 위원장과 끌어안으며 만난 뒤 편지를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말함. 후지모토씨는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등을 일본에 귀국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미리 준비한 편지를 통역에게 읽게 했으며, 김 위원장은 아무 말 없이 이를 들었다고 전함. 요코타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11월 니가타(新潟)에서 실종된 뒤 일본 납북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짐.
 - 후지모토씨는 "일본과 북한의 가교로서 요코타 메구미를 데리고 일본에 돌아오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함. 그는 최근 북한과 일본의 국장급 협의에 대해 "그런 정도로는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얘기하지 않으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그는 방북 전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엮은 수기를 최근 고단사(講談社)에서 출간했으며,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추가해 북한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함. 그는 지난 9월 재방북 추진 과정에서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 방문 연기를 요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 수락했으나 북일 회담이 재개되면서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받지는 못했다는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함. 마쓰바라 당시 납치문제담당상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를 비밀리에 면담한 것은 인정했지만 재방북 연기를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그에게 공문서를 부탁할 선택지 또한 없었다고 후지모토씨의 수기 내용을 부인함.
 - 후지모토씨는 1982년 방북한 뒤 1989~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음. 이후 일본 경찰과의 접촉 사실이 발각돼 북한에서 결혼한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2001년 탈북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마. 기 타

- **외교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곧 제출 예정(11/27,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중국 정부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측에 동중국해 일부 해역 관련 대륙붕 경계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연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한국 측이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은 이미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곧 대륙붕한계위원회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 측은 중국과 이 일과 관련해 논의가 있는지는? 그리고 중국은 언제 관련 안건을 대륙붕한계위원회 측에 제출할 것인지?"라고 질문함.



- 홍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 측의 주장은 명백하고 일관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이미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확정을 위한 준비 업무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했고 곧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라고 전함.

● "미얀마 대통령실, 北과 핵거래 부인" <美방송> (11/28, 연합뉴스)

- 미얀마 대통령실이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 밀반입 시도와 관련해 북한과 핵 협력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얀마 언론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대통령실의 자우 호타이 국장은 최근 일본이 미얀마로 향하는 선박에서 핵무기 제조용 우라늄 원심분리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얀마 독립언론 '이라와디'에 미얀마는 핵을 보유하려는 야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힘.
- 호타이 국장은 또 미얀마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정을 명확히 지킬 것이라고 확인함. 이라와디는 그러나 호타이 국장이 미얀마와 북한 간의 미사일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함.
- 미얀마의 망명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이라와디는 스웨덴 언론인 버틸 린트너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미얀마에서 미사일 개발에 여전히 참여하는 등 미얀마-북한 간 미사일 협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 첫 합의 채택(11/28, 연합뉴스)

-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절차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함.
-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함.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됨. 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됨.
-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컨센서스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지난해 결의안은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됨.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컨센서스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다름.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음. 중국은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제3위원회는 이날 이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도 찬성 83, 반대 31, 기권 86으로 채택함.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12월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며 총회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고위급 대북·외교현안 정책조율(11/2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양국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함. 특히 내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필요한 협의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음.
-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소식통이 26일 전함.
- 김 차관보는 또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도 만나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기조와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내달 4일께 미국을 방문해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동향과 6자회담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함.
- 현지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이 담보됐지만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과 북한 동향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시의성 있는 정책협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함. 한미 양국은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대북 공조를 긴밀히 유지해나갈 방침임.

나. 한·중 관계

● 中 "韓 동중국해 대륙붕 신청 움직임 주목"(11/26, 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조만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의 대륙붕 신청 계획)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함. 홍 대변인은 이어 자국도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획정을 위한 준비 업무



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했고 곧 열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함.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동해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된다"는 주장을 펴 왔음. 이는 "한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우리 정부의 견해와 유사한 것임.

-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는 입장이 같지만 한·중 간 경계 부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짐. 반면 일본은 한중 양국의 주장이 자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한중, 베이징서 차관급 전략 대화 개최(11/26,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26일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개최함.
- 양국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베이징(北京) 시내 외교부 청사에서 제5차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고 양자 현안과 양국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우리 측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중국 측에서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양측은 전략 대화에 이어 만찬까지 4시간 30분가량 화동함.
-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방안,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국 측은 우리 측에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強·38)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류창은 지난 1월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로 조사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드러남. 그러자 일본과 중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류창 인도를 요청해왔음.
-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지난 2008년 태동한 고위급 전략 대화는 그동안 4차례 개최됐음.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한중 소통 창구라는 평가를 받아옴. 안 차관은 27일 오전 중국 외교학원에서 강연하고 28일 오전에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짐.

● 시진핑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희망"(11/28,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8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정세하에서 더 큰 발전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시 총서기는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후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축전에 대한 답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시 총서기는 또 "한-중은 우호적 이웃국가로 수교 후 지난 20년간 양국 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면서 "중국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



시하고 있어 한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 "日, 독도 단독 제소 판단 차기 정권에 넘겨"(11/26,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부 판단을 차기 정권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지이신문이 26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 단독 제소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함.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정부 간 교류를 재개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을 악화하는 것은 이득이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함. 일본은 지난 8월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ICJ 제소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공동 제소를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단독 제소로 방향을 바꿨음.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독도 제소 준비를 완료했으나 '준비가 되는대로 제소한다'는 애초 방침에서 궤도를 수정함.
- 외무성 간부는 제소 방침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임. 동아시아 안보 영향을 우려한 미국의 중개로 한·일 정부 간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됨. 지난 22일 외교 차관급 경제협약에 이어, 24일에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림.
- 니혼게이지이신문은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자민당이 공약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권할 경우 한국의 새 정권과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제소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봄. 자민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ICJ를 통해 해결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음.

● 日 민주 총선 공약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11/27, 연합뉴스)

-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함. 일본 민주당의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6일 치러질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을 발표함.
- 민주당은 공약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있다면서 국제법에 의거한 평화적 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밝힘.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거를 시정하겠다는 뜻임.
-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 주장하고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함.
- 민주당은 국방정책과 관련 전수방위에 입각해 동적 방위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활발한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난세이(南西) 제도 중시 등의 방위대강을 토대로 방위력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함. 이와 함께 해상보안청 등의 경계감시와 경비체제를 확충하고 센카쿠 등 영토와 영해의 수호를 견고히 하기로 함.
 - 외교 분야에서는 기축인 미일 동맹을 심화하고 주일 미군 재편에 관한 양국 합의를 착실히 실천해 역지력을 유지한 가운데 약 9천명의 미 해병대를 해외로 이전하기로 함. 또 미일 지위협정의 운용·개선을 더욱 진전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음. 아시아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대국적 견지에서 강화하고, 동중국해를 '평화·우호·협력의 바다'로 하기 위해 특히 해양 분야에서 중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기로 함.
 - 원전 정책은 2030년 원전 없는 사회를 목적으로 '원전 수명 40년'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증설을 하지 않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을 확인한 원전만 재가동하기로 함.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 책임을 지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로 함. 이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경제 분야에서는 환경·에너지 분야, 의료·양로분야, 농림수산업 등을 성장 산업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수요를 늘려 2020년까지 명목 3%, 실질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로 함. 이를 통해 2020년까지 4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함.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디플레이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과도한 엔고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의석을 75석 삭감하고 참의원(상원) 정수도 40석 정도를 줄이기로 함. 의원 세습(3촌 이내 친족의 같은 선거구 출마)을 금지하고, 기업·단체의 정치헌금도 금지하기로 했음.

라. 미·중 관계

- **美재정부 "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어"(11/28, 인민일보)**
 - 미국 재정부는 27일 주요 무역국에 대한 '국제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적 우세를 취한 적이 없다고 밝힘.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10년 6월 위안화 환율형성기제 개혁을 시작으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되어 중국 경상수지 흑자의 GDP 비율이 하락했고 이밖에도 환율기제를 유연화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며 시장이 주도하는 환율제도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함. 따라서 미국 재정부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미국 재정부 보고서에서는 또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위안화 환율



개혁에서 여러 조치를 취했고 그 가운데 올해 4월 중앙은행이 위안화 달러 거래가격 변동폭 확대를 결정했다"고 지적함. 또한 "중국 정부가 5월에 연 제4차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에서 다시금 경제모델전환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했고, 6월과 7월에도 중앙은행에서 구체적으로 금리개혁 방안을 취해 예금대출 금리와 관련해 은행에 큰 유연성을 제공했다"고 설명함.

마. 미·일 관계

● 성폭행 물의 빛은 주일 美 해군, 야간 음주 금지령(11/27, 연합뉴스)

- 일본인 여성 성폭행 사건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주둔 미국 해군이 야간 금주령을 내렸음.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일 미 해군사령부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요코스카(横須賀) 기지 등 일본 내 모든 해군 기지에 소속된 미군의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림. 이에 따라 나가사키(長崎)현의 미 해군 사세보(佐世保) 기지는 소속 사병 약 3천100명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음주를 금지함.
- 이는 오키나와(沖縄)에 근무하는 미 해군 사병 2명이 지난달 현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주일 미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분출하는 데 따른 조치임. 주일 미군은 지난달 성폭행 사건 직후 모든 사병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했으나, 야간 가택 침입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주일 미 해군은 제7함대의 해상부대에도 야간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미군 사세보 기지 관계자는 "일부 사병의 행위가 전체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미군이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국민에게 용인될 수 없는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을 호전하려는 조치"라고 말함.

바. 중·일 관계

● 중국 해양감시선, 센카쿠 해역 이틀째 순항중단(11/26, 연합뉴스)

- 중국 해양감시선이나 어정선 등의 공무선이 지난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을 순항하지 않았다고 국제재선 등 중국 매체들이 26일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의 보도를 인용해 전함.
- 이 보도로는 중국의 하이젠(海監) 15 등 4척의 해양감시선이 지난 23일 오후 센카쿠 접속수역에서 빠져나와 중국을 향해 이동한 뒤 24일과 25일 이틀간 중국 공무선이 이 해역에 나타나지 않았음.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하자 지난달 20일부터 35일 간 계속 해양감시선 등을 교대로 동원, 센카쿠 12해리 수역이나 접속수역, 인근해역 등을 순항하며 주권시위를 벌여옴.
- 그 이후 이 수역에서 공무선이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중국은 일본의 구두 경고 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센카쿠 12해리 등을 순항함. 중국의 센카쿠 주변 해역 공무선 철수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 순항에서 정기 순항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인지는 불분명함. 하



지만 중국은 센카쿠를 비롯한 분쟁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순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왔음.

- 이에 따라 최소한 정기적인 순항 및 감시 활동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센카쿠 해역 순항이 일상화하자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단독 실효 지배 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에 대해 타국 영토를 침범하는 부당행위를 중단하고 센카쿠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함.

● <이임 주중 日대사 "일본과 중국 부부보다 긴밀">(11/28, 연합뉴스)

-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물러나게 된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 대사가 양국 관계를 부부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음.
- 니와 대사는 지난 26일 대사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고별 회견에서 "일중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긴밀하다"며 "부부는 싸우고 헤어질 수 있지만 양국은 헤어질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함. 그는 양국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도 마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화와 교류의 기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버렸다고 아쉬워함. 그는 현재 양국 관계가 영토 분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이 오래가는 것은 양국에 해가 된다고 우려함.
- 2010년 6월 베이징에 부임, 2년4개월 동안 일한 니와 대사는 "센카쿠 문제에서 시작해 센카쿠 사태로 끝이 나게 됐다"고 토로함.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해 중일 관계가 급랭했고, 겨우 회복되는 듯했던 양국 관계는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면서 파탄이 났음.
- 한편 니와 대사는 일본 내 일각에서 '일본 기업에 중국 시장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지적에 "그런 관점은 매우 오만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음. 이토추(伊藤忠)상사 회장 출신인 니와 대사는 민간 출신으로는 처음 주중 대사로 임명됐음.
- 지중(知中)파로 알려진 니와 대사는 중일 관계가 전례 없이 엄중한 도전에 처한 국면에서 양국 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분주히 일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 그는 지난 6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자국의 센카쿠 매입 움직임과 관련해 "매입이 실행되면 일중 간에 엄중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가 자국내 우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음.
- 최근 일본을 거칠게 비난해온 중국 정부는 떠나는 니와 대사에게만은 호의적인 평가를 했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 26일 "우리는 니와 대사가 중일 관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함.
- 니와 대사는 28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짐. 일본 정부는 니와 대사의 후임으로 외무성 관리 출신인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를 내달 중국



에 보낼 예정이다.

- **中, 주중 日대사 퇴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11/29, 인민일보)**
 - 2012년 11월 28일,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연례브리핑을 열었다.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일본대사가 최근 가진 퇴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 발전은 더 이상 일본을 필요치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며, 일본 측은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홍대변인은 "니와 일본대사 발언에 대해 본인은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중국은 상호원인적인 개방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해 왔다. 둘째, 중국은 중일 간 4개 정치문건을 바탕으로 양국의 전략적 상호호혜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양국은 물론 양국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셋째, 중국의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고 일관적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측이 불법적인 '섬 매입'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치닫게 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함. 더불어 홍대변인을 "성의 있는 태도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양국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 중·러 관계

- **중국 온가보 수상 러시아 방문예정 (11/28, 산케이신문)**
 - 중국 외무성 국장은 28일의 정례 기자 회견에서, 온가보 수상이 12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발표함.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상하이 협력 기구(SCO)의 수상 회의에 참석.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수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아. 일·러 관계

- **<러시아-일본 노다 日총리 방러 일정 두고 신경전>(11/30, 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방러 일정 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임.
 - 일본 교도 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노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애초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노다 총리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함. 러시아 측은 그러나 이같은 보도를 즉각 반박하고 나섬.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타르타스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노다 총리의 방러가 내년 1월 후반에 이뤄질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서 정확한 방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연기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함.
 - 페스코프 실장은 "지난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방안이 논의돼왔고 가능한 방문 시점으로 올해 11월과 12월 등



- 이 거론됐다"면서 "내가 알기엔 최근까지 1월 후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됐다"고 강조함.
- 러-일 정상은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총리가 12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문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러시아는 그러나 쿠릴열도가 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쿠릴열도 문제 논의를 위한 노다 총리의 12월 방러 계획이 무산되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특히 푸틴의 건강 이상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크렘린궁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자신의 방러 일정이 연기됐다는 노다 총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임.
 - 러시아 현지에선 앞서 10월과 11월로 잡혔던 푸틴의 외국 방문 일정들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추측이 무성하게 제기됨. 푸틴 대통령이 서둘러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심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외국 방문 일정을 잇달아 연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았음. 특히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 불편하게 걷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디스크 와병설이 더욱 힘을 얻음. 크렘린 공보실은 그러나 이같은 언론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며 푸틴 대통령이 평소 해오던 유도 대련 훈련을 하다가 근육이 늘어나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반박해왔음. 그의 잇따른 외국 방문 일정 연기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거나 다른 외국 방문과의 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 등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함.
 - 이와 관련 최근 푸틴과 가까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소 즐기는 유도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를 들어 올려 메치려다 척추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하다고 밝히기도 함.

자. 기. 타

- 상무부, 韓·美·EU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추가조사 착수(11/28, 인민일보)
 - 상무부는 공고 발표를 통해, 11월 26일부터 EU, 미국, 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추가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힘. 이전 상무부는 상기 3국에서 수입된 상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번 조사는 중국 국내기업들이 제기한 것으로 세관 데이터를 보면, 올



해 1월에서 8월까지 독일에서 수입한 폴리실리콘이 매달 평균 1000여 톤이고 5월 한 달 동안에만 2000톤을 초과했으며, 9월 들어서는 갑자기 3991톤으로 급격히 증가함. 장쑤(江蘇) 중녕(中能) 폴리실리콘 제조 업체와 장시(江西) 싸이웨이(賽維) LDK를 포함한 5개 중국 내 기업들은 미국, EU,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이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후에 단 기간에 중국 수출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바람에 중국 국내 산업이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 공고에서 밝힌 요구사항에 근거해, EU, 미국, 한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와 수출업체는 12월 11일 전까지 서면 형식으로 2012년 1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중국에 수출한 폴리실리콘 양과 가격 내역서를 제출토록 했고, 또 2012년 12월부터 본 안건 1차 판결공고 발표 당월까지 매달 15일 전에 지난 달 중국으로 수출된 제품의 양과 가격 내역서도 제출해야 함. 이 밖에, 상무부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및 사실에 근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함.

● 전자여권 속 臺灣명승지... "臺灣정책 변화 없어"(11/28, 인민일보)

- 국무원 타이완사무관공실은 2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음. 대륙 측은 최근 새로운 전자여권을 만들어 일부 타이완 명승지 그림을 새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타이완 측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해 왔음. 이와 관련해 국무원의 양이(楊毅) 타이완사무관공실 대변인은 "중국의 입장과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양안은 지금까지 양안 관계가 거둔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밝힘.

● 중국 국경관리강화, 티벳인 망명 급감, 자유요구 결속 강해져(11/29, 산케이신문)

- 중국에서 티벳인들이 자신의 몸을 불로 태우는 방식의 자살이 잇따르는 중, 인도에 망명하는 티벳인의 수가 최근 몇년, 격감하고 있음. 티벳 망명 정부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티벳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탈출 경로가 되는 네팔과의 국경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인도 북부 다람사라의 망명 티벳인 사회에서는, 동포가 받는 "이중의 억압"에 위기감이 높아지는 한편,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결속은 한층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